국가 안전 大진단과 안전산업 발전 방안

2014. 8. 26

국민경제자문회의
산업연구원

목 차

Ⅰ 국민 안전사회 요구 상승

Ⅱ 국민 참여 국가 안전 大진단 추진

Ⅲ 국가 안전투자와 안전산업 육성

Ⅳ 안전산업의 미래 비전

I. 국민 안전사회 요구 상승

- **최근 세월호 침몰 등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**

  *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('14.2), 세월호 침몰('14.4), 고양 시외버스 터미널 화재('14.5), 대형 싱크홀 발생('14.8) 등

- **교량 · 터널 · 항만 등 국가 기반시설의 노후화도 빠르게 진전**

  * 국가기반시설 중 30년 이상 노후시설 : ('14) 9.6%(1,864개) ➔ ('24) 21.5%

- **우리나라 안전사고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를 기록**

  *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 2.5명(2012년), OECD 평균 1.1명의 2배이며, 칠레 다음으로 2위

  * 산재로 인한 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수 10.1명(2009년)으로 OECD 국가 중 3위

  * 인구 10만명 당 안전사고 사망자수 OECD 국가 중 2위

- **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을 넘어서면 안전사회에 대한 기대와 요구 급증**

  *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현상이 급속히 확산

⇨ **국가 안전 혁신 노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안전산업 육성방안 마련 필요**

〈참고1〉 안전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

높은 안전요구

- **시설물 안전수준**은 10점 만점에 5.3점으로 선진국(7.8)보다 **크게 낮다고 평가**
- 안전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**투자 필요성**에 **대부분(97.2%) 공감**

낮은 안전의식

- 국민들은 우리사회의 안전의식을 100점 만점에 17점으로 평가
  - * 2007년 30.3점에 비해 크게 하락
  - * 여성, 고령, 고소득층 일수록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
- 생활 속 안전의식 실천이 미흡, 특히 **20대 • 학생층 취약**
  - * 승용차 뒷좌석 '안전벨트 미착용' (67.5%), 비상구가 없는 노래방도 '그냥 이용' (81.9%)

미흡한 안전교육 실태와 높은 교육 수요

- 심폐 소생술, 소화기 사용 등 **실습 교육을 받지 못한 응답자**가 30~40%
  - * 화재 발생 시 대피능력 부족 31.7%, 특히 여성 · 학생 · 주부 취약
- 재난사고 예방 **교육의 필요성**에 대해 대부분(98.7%) 공감
  - * 실제 교육 참가 경험자는 36%에 불과

('14.7.31.~8.12., 20세 이상 성인남녀 1,000명 대상 전화 설문, 현대경제연구원)

II. 국민 참여 국가 안전 大진단 추진

1 기본 방향

- **'全 국민'의 참여 하에 '사회 全 영역'을 점검하는 '대한민국 안전 大진단' 실시**
  - 정부 중심의 부분적 안전진단에서 탈피, 민간의 창의와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'국민 참여형 모델' 도입
  - 참여도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App 등 ICT기술 활용
  - 중앙-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중심의 즉각적인 대응에 중점

- **안전 大진단을 통해 국가 안전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,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써 안전산업 육성기반을 마련**
  - 시설 보수 · 보강 수요로 공공과 민간의 투자 유발
  - 안전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
  - 불합리한 기준 정비 등 안전 관련 법 · 제도 선진화

  → 안전산업의 시장 기반 확대

〈참고2〉 국가 안전 大진단과 안전산업 육성



II. 국민 참여 국가 안전 大진단 추진

2 추진 방법

진단 주체

- 국민 참여를 통한 '집단지성' 활용 : 신고 · 제안 중심의 Bottom-up 방식
- 민관 합동 안전 大진단 T/F 구성 : 진단 · 권고 위주의 Top-down 방식

진단 대상

-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 안전 전 분야를 Matrix로 Cross-check
  - * 시설별 : 교량, 건축물, 교통수단 등
  - * 대상별 : 시설 · 수단별 종사자, 여성 · 노인 · 장애인 · 아동 등
  - * 상황별 : 화재, 재해, 재난 등

정보 수집

- 신고 편의를 위해 중앙 · 지방 정부의 안전 App, SNS 등 모든 채널 활용
  - * 전화, 스마트폰 App(안전디딤돌 등), PC 홈페이지, SNS 등 정보 수집

결과 도출

-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분석 모델 적용
  - * 사업의 우선 순위 도출, 예산 산정 기초 마련 및 법 · 제도 개선 반영
  - * 大진단 전 과정을 '국가 안전 백서'로 발간

파생 효과

- 안전 현장조사, 진단 등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
- 시설 진단 · 유지보수 사업, App · 시스템 개발 등 ICT분야 관련사업 수요 확대

II. 국민 참여 국가 안전 大진단 추진

3 세부 추진 과제(안)

안전 大진단 T/F 구성

* 민관 합동(공동위원장)으로 안전행정부 또는 국가안전처 중심으로 운영
* 大진단 기본계획 수립 및 홍보, 진행상황 모니터링, 분야별 제도개선 권고 등

중앙 · 지방간 협업체계 구축

* 중앙 : 안전행정부 재난관리실(총괄), 각 부처 상황실 구성 · 운영
* 지방 : 시도 및 시군구 현장기동반 구성 · 운영

인력 / 예산

* 인력 : 소요 산정 후 중앙(직제 개정) 및 지방(지자체 표준정원)에 반영
* 예산 : 중앙(예비비 및 특별교부세), 지방(자체 재원) 활용

시스템 연계 · 운용 및 통합시스템 구축

* (올해) 기존 중앙부처 및 지자체별로 산재된 21개 프로그램 간 연계망 구축

  (예)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(안행부), 안전디딤돌(소방방재청), 서울안전지키미(서울시) 등

* (내년 이후) 일회성이 아닌 국가 아젠다로 지속 추진하기 위한 ICT기반 '안전진단 통합시스템' 구축

〈참고3〉 ICT 기반 '안전 진단 통합시스템' 개요

기존의 참여형 안전 진단 시스템		통합형 안전 진단 시스템 전환	
현황	• 중앙 · 지자체별 안전 App 개발(21개)	통합방향	• 모든 정보를 통합, 관리 체계 일원화
문제점	• 진단 지역 · 대상 국한 • 예산 · 인력 · 관심 부족 → 사후관리 미흡 • 종합 DB 부재 및 미공개 • 민관 협력 체계 부재	개선과제	• 중앙 DB 관리 기관 지정 • 예산 · 인력 확대 • 종합 DB 관리 및 정부 3.0과 연계 • 민관 협력 체계 구축

⇨ 기존 부분적 대응, 복구 중심 ➔ 종합적인 예방, 대비 활동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 체계 수립

신고 · 제보	접수 · DB화	점검 · 진단	조치
全국민(집단지성)	통합관리센터	부처 · 지자체	부처 · 지자체
• 스마트폰 App • 인터넷 Web • 신고전화 등	• 소관 분류/전달	• 현장 확인 • 개선방안 마련	• 시설 보수/보강 • 제도 개선 • 교육/훈련/안내

집행확인 · 분석 · 환류
大진단 민관 T/F
• 데이터 분석 • 사업 우선순위 선정 등

III. 국가 안전투자와 안전산업 육성

1 안전산업 발전 여건

- 국민들의 높아진 안전 욕구 + 국가 안전 大진단 시스템

  ➔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 창출 가능

  * 점검 · 진단 서비스, ICT융합, 시설물 보수 · 보강 및 건설, 안전 교육 · 컨설팅, 시설/행사 안전요원 등

- 다만, 안전산업의 특성상 초기 공공투자 등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
  - 공공재적 특성(시장에 의한 과소 생산)과 높은 규제 의존성 등

〈 안전산업의 특성 〉

공공재	규제 · 공공수요 의존	ICT/파생산업과 연계
•국가 ·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 •정부 정책의 필요성	•정부 정책/규제 변화에 영향 •공공수요가 산업발전에 큰 영향을 미침	•국가 전반의 방재시스템과 ICT기술 연계의 중요성 대두 •개인 · 기업 정보보안 요구 증가

〈참고4〉 안전산업 영역 예시

	기기 · 제품	서비스	ICT융합
방범	방범기기, 출입관리장치 등	시설/행사, 운반경비 등	홈 시큐리티 장치, U-City 방재도시 등
방재	소화설비, 방화 · 방염 자재, 방재로봇 등	구조물 진단, 재난교육, 손해보험 등	지리정보시스템(GIS) 활용 방재시스템
정보보안	보안장비, 정보보호 제품 등	정보보안 컨설팅, 보안 관리 · 운용 등	빌딩 종합 관리시스템 등
생활안전	안전운전 자동차 부품(스마트카), 안전 산업 설비 등	도로안전, 에너지안전 관리, 위해식품 안전도 인증서비스	실시간 건강관리 원격의료 등

III. 국가 안전투자와 안전산업 육성

2 우리나라 안전산업의 현주소

높아진 안전욕구를 산업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 취약

수요 측면

- 공공 SOC 투자는 신규투자 중심으로 **유지관리 지출 미흡**
- 공공부문에 비해 **민간 부문의 역할 제한적**
- 민간수요는 **법규가 정한 최소한의 기준**을 맞추는 수준으로 시장 정체

공급 측면

- 투자 부족으로 **안전 기술수준이 낮고 전문인력도 부족**
- 자금력과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**영세기업 중심**의 산업구조

➔ 국내 안전산업의 취약점과 특성을 감안,

선도적 공공투자 및 제도 개선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전략적인 산업육성 필요

III. 국가 안전투자와 안전산업 육성

3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5대 과제

수요 측면 : 시장 형성 촉진

① 공공투자와 민간투자 유도

▪선도적 공공투자

- 안전투자 예산 확대
- 학교 등 사회 · 생활 기반시설 우선투자

▪민간투자 활용

- RTO/RTL 도입
- 안전진단 등 민간기업 참여 확대

② 제도 선진화 및 법적 책임 강화

▪기준 · 규제 선진화

- 안전기준을 글로벌 기준으로 조정
- 안전규제 정비/보강

▪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강화

- 법규 실행력 제고
-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

공급 측면 : 산업역량 강화

③ R&D 확대와 인력 육성

▪R&D 확대

- 안전 R&D 투자 확대
- 핵심기술 집중투자
- 안전기술(산업) 분류체계 구축

▪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

- 정부 일자리 사업 연계를 통한 단기 · 중장기 인력양성
- 대학 및 전문기술 교육 지원

④ 新 산업화와 해외진출 여건조성

▪상품 · 서비스 · 시스템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

- 정부구매 확대 및 테스트베드 지원
- ODA 지원 활용
- 해외인증 획득 및 수출상담 지원 등

▪대 · 중소 파트너십

- 공동기술개발 확대
- 대 · 중소협력 모델 발굴을 통한 대기업 참여촉진

⑤ 안전 금융 · 보험 산업 발전

▪의무보험 확대

- 법정 의무가입 확대, 벌칙조항 명문화

▪민간 금융상품 도입

- 민간 재난보험 개발

▪안전투자펀드 활용

- 차질 없는 조성 및 파급효과가 큰 부분에 우선 투자

과제 1. 선도적 정부투자와 민간투자 유도

① 선도적 공공투자로 신규투자 유발

현황

- 1970년대 SOC 건설 집중, 30년 이상 경과 시설이 다수
  - * 30년 이상 시설물 비중 : ('14) 9.6% ➔ ('24) 21.5%
- 신규투자 중심으로 유지 · 보수 투자에는 소홀

대책

-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병행 : 『사후 복구』 ➔ 『사전 예방』, 『비상 대응』 ➔ 『일상 관리』
- 안전투자 예산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
  - • 안전 大진단 결과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시설의 유지 · 보수 투자 비중 확대
- 학교 등 사회 · 생활기반시설물에 우선 투자

학교 시설투자 확대의 시급성

-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일반국민 설문조사 결과, 75.4%가 '학교시설'이라고 응답
-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나, 무상급식 등 정치적 사안에 비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측면
  - * 서울시 학교시설 전수조사('11.5)결과, 위험시설이 31동, 30년 경과시설도 332동(9.6%)을 차지
  - * 반면에 서울시 학교시설 개 · 보수 예산은 지속 감소(천억원) : ('10년 이전) 4.6 ➔ ('11) 1.8 ➔ ('14) 0.8

과제 1. 선도적 정부투자와 민간투자 유도

② 민간투자의 적극 활용

현황

- 시설 유지 · 보수 관리에 필요한 재원, 인력 등을 공공부분 자원으로만 충당하는 데 한계

대책

- 기존 시설은 RTO/RTL, 신규 시설은 BTO/BTL 등으로 민간투자 활용
  - * 기존 신규건설(Build) 외에 보수 · 보강(Rehabilitate) 방식을 추가 도입
  - * 현재 민간투자가 불가능한 우수저장시설, 사방설비 등 방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허용 검토
  - *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BTL 방식에 민간제안 허용 검토
- 안전관련 진단 · 교육 등 서비스 분야에 민간기업의 참여 촉진
  - * 손해보험사의 부수업무로 방재컨설팅 업무 허용 등

과제 2. 제도 선진화 및 법적 책임 강화

① 안전기준 · 규제 정비

현황

- 글로벌 수준과 동떨어진 기준 · 규제로 인해 수요 창출 등 사업 기반 조성에 걸림돌

대책

- 안전기준을 **글로벌 기준**에 맞추되, **점진적 도입**을 통해 국내 기업의 수용성 제고
  - 시설 · 제품 · 서비스에 대한 안전기준을 점검 · 보강
    - * (시설) 소규모 공연장 등 다중 이용 문화시설 건축물 등록 전 안전검사 의무화
    - * (제품) 소방용품 내용연수 지정
    - * (서비스) 체육시설 안전요원 배치 기준 강화 등
  - **'안전등급제' 적용 확대 · 공시 의무화**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안전기술 **인증절차 간소화**
    - * (현행) 공공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도 비공개 ➔ (개선) 폭넓은 안전등급제 적용 및 공시 의무화
- **제2차 정상화 과제와 연계, 안전 관련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**
  - * 안전 관련 현장 개선(53개) : 노후 위험 가스시설 정밀검사 확대 등
  - * 안전 행정 개혁(20개) :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안전분야 평가 강화 등
  - * 안전 의식 제고(17개) : 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안전 교육 실시 등

〈사례〉 안전기술 인증 실패 · 지연 업체

국내 안전기술 인증 실패 후 해외진출 성공 (분무식 스프링클러)



- 국내 중소기업이 독일과 합작으로 개발,
 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는 분무식 스프링클러
- 알프스터널 화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,
  기존 살수식 스프링클러보다 훨씬 우수한 효과 검증
- 독일 VDS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았으며,
  유럽을 위시하여 해외 전역의 시장 진출에 성공한 제품

개별법에 따른 안전검증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아, 국내 생산하고도 설치할 수 없음

국내 안전기술 인증 지연에 따른 사업화 실패 (투척식 소화기)



제품개발 후 인증 지연으로 사업 포기

- 신규 안전규제 시행에 따라 제품수요 증대 예상,
  제품 개발 및 생산비로 70억원을 소요하면서 신제품 개발
- 규제 시행초기 특정 기간에만 수요가 발생하는 특징적 시장이나
  旣 개발 제품의 관련 승인 및 인증 취득이 1년 이상 지연
- 일본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, 국내 인증이 쉬운 제도적 모순으로
  해당 시장을 일본제품 수입판매업자 선점

과제 2. 제도 선진화 및 법적 책임 강화

② 법적 책임 강화

현황

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법적 책임 미흡으로 안전투자에 소홀

* 안전관련 법 · 제도 준수를 위한 비용보다 미이행에 따른 범칙금 및 손해배상액(피해액 범위 내)이 과소

대책

안전 관련 **법규의 실행력 제고**

* 안전사고 관련 처벌법규에 대한 종합점검 실시(입법상 미비점, 행정감독상 문제점) 및 제도 개선
* 법적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

  (예) 불법구조변경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

안전불감증 개선을 위한 **징벌적 손해배상제도** 도입 검토

* 고의 · 중과실로 사고를 유발한 자에게 손해전보액을 넘어서는 징벌적 의미의 배상책임 부과

  (예) 하도급법의 경우 원사업자가 고의 · 중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

과제 3. 안전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인력 육성

① 안전산업 관련 R&D 확대

현황

- 정부의 안전 R&D 지원은 소규모, 단기과제 중심으로 산업화 관점 미흡
  - * (예) 2014 제품안전기술 기반조성사업(22건)의 경우 평균 출연금 1.5억원, 지원기간 2년 이내
- 안전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시스템 미비

대책

- 안전 R&D 투자 확대
  - * 현재 3% 수준인 전체 R&D 예산 대비 안전 R&D 비중을 확대
- 산업 관점에서 센서, ICT융합, 생활안전 등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
  - * 센서기술 : 보안 및 안전 관련 핵심요소로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센서에서 스마트 센서로 진화
  - * 융합보안 분야(의료, 전력 등), 생활안전(먹거리 안전, 사이버 보안 등)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투자 확대
- 안전 관련 별도의 기술(산업)분류체계 구축 ➔ 국가 R&D사업 기획 · 관리에 활용
  - * 녹색기술의 경우 '녹색기술분류체계'를 마련하여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및 R&D 예산편성 등에 활용

과제 3. 안전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인력 육성

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강화

현황

- **전문인력 수급이 체계적이지 않아 양질의 인력 확보에 애로**
  - * 대학 · 전문대학 : 산업안전, 소방 등 법적 채용이 보장된 분야에 한정
  - *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: 4,500개에 약 10만 명이 종사하나 절반 이상이 비전문가

대책

- **정부의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장 · 단기 인력양성**
  - * 단기 : 국가 안전 大진단 관련 업종 퇴직자, 관련 학과 유휴인력 활용
  - * 중장기 : 청년 인턴제, 산업재해 예방 사업 등을 확충,
    건축 · 토목 · 안전공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의 안전분야 취업을 적극 지원
- **관련 학과, 국가기술자격 등 대학교육 및 전문기술 교육 체계 마련**
  - * 대학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해 안전분야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 및 인력양성 지원
  - * 유지관리기능사, 유지관리사 등 국가기술자격 신설 검토
- **초 · 중등 교육 강화 및 대국민 안전교육 내실화**
  - * 학교 표준 교과과정에 안전교육 반영
  - * 아파트 화재 시 대피 요령, 심폐소생술, 소화기 사용, 비상구 바로 알기 등 실생활 위주로 교육

과제 4. 안전 신상품 · 서비스 · 시스템 개발과 해외진출 여건 조성

① 안전 신상품 · 서비스 · 시스템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

현황

- 자금력, 마케팅 역량 부족한 영세 내수기업 중심으로 기술혁신, 해외시장 개척 등에 한계

대책

- 안전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
  - * 안전성능을 공공기관 구매 관련 규정에 반영
- 중소기업 지원형 종합 '안전 랜드' 설치
  - * 안전문화 + 산업홍보 + 재미를 결합한 체험형 테마파크 → 신제품 테스트베드로 활용
- 경제협력사업 등을 통한 개도국 진출지원
  - * (예) ODA를 통해 가스공사의 가스안전관리시스템 베트남 수출(2011년)
- 해외인증 획득 지원 및 수출상담회 등 개최
  - * 안전시장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국, 동남아 등 신흥시장을 타깃으로 해외전시회 참가 및 수출상담 지원

➔ 우리 강점인 ICT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안전 상품 · 서비스 ·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이들을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는 활로 개척

과제 4. 안전 신상품 · 서비스 · 시스템 개발과 해외진출 여건 조성

② 대 · 중소, 민관 파트너십 강화

현황

- 영세 규모로는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 불가 → 대기업, 공기업 등과 파트너십 필요

대책

- 대 · 중소, 민관 공동 기술개발사업 확대를 유도 ('안전투자 펀드' 우선 지원)
  - * 가스공사와 중소기업이 3:1의 비율로 6억원을 투입하여 LNG선 접안 및 계류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('14년)
  - ➔ 향후 5년간 약 96억원의 수입 대체효과
-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 안전분야에 대해 대 · 중소 협력방식을 통해 허용

국가기관 발주 보안관련 시스템(SW) 입찰 시 대 · 중소 협력

- 대기업 입찰 제한으로 중소기업이 수주하여 대기업에 하청 또는 외국계 기업이 수주
  - * SW산업진흥법상 국가기관 발주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배제
- 지속적 유지 · 보수 곤란,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제약 등의 문제 대두

➔ 대 · 중소간 공동입찰을 허용하되, 업체별 역할분담 · 사업대가 등 공개 의무화

과제 5. 안전 금융 · 보험 산업 발전

현황

- 안전 관련 배상책임 보험 가입은 선택사항, 미가입 시 제재규정 미비
- 민간 보험 시장에서 안전위험에 대한 상품 개발 · 공급 미흡
- 안전 투자를 위한 금융지원 시스템 미비

대책

- **의무보험**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
  - * 의무보험 대상 : (현행) 자동차 보험 등 26종 ➔ (확대) 여객운송업자, 환경오염 배상책임 보험 등 추가
  - * 의무보험 보상한도 및 미가입 시 벌칙조항 명문화
  - * 여신거래약관, 하도급 계약 등 각종 표준양식에 의무보험 가입을 명문화
- 재난위험을 포괄 담보하는 **민간 금융상품(재난보험)** 도입 검토
  - * 재난시설의 소유자가 재난으로 타인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 보험
- **안전투자펀드**의 활용도 제고
  - * 펀드의 조기 조성('15년, 3조원) 및 산업화가 용이한 분야에 집중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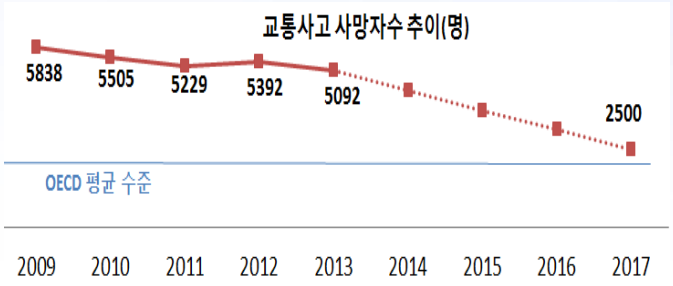
IV. 안전산업의 미래 비전

1 국민이 안전한 나라

재난 ·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여 '안전선진국' 진입

- 3대 재난사고(교통, 산재, 화재) 사상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소

  * (예)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현재의 50%수준으로 감소
    ('13) 5,092명 ⇒ ('17) 2,500명



2 안전산업의 新성장동력화 (창조산업 영역으로까지 확대)

국내 안전산업시장이 현재 GDP의 0.4%수준에서 1% 수준으로 성장할 경우(('13) 6.7조원 → ('17) 17.4조원)

- 안전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30조원 이상

  *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안전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(10.7조원)와 전 · 후방산업연관효과(19.5조원)를 합산

- 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는 17만명

  *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안전산업 총산출 10억원 증가 시 13명 내외의 일자리 창출효과 발생

작성 : 산업연구원(2014)

감사합니다.